

도시계획 인구 부풀려 난개발에 혈세 낭비

전남 22개 시·군, 구도심 공동화·재정 악화 악순환 불러

도, 심의 기준 대폭 강화키로

■전남도 22개 시·군의 지난 2008년 도시지역인구는 133만3739명이었다. 그런데 당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은 2015년 계획인구를 252만8629명으로 작성했다. 12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광양의 경우 10만4488명, 해남 8만9918명, 여수는 8만512명이 과다 책정됐다. 인구가 급증한다는 전제 아래 주택,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을 줄줄이 설치하면서 과부하와 난개발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구도심이 텅텅 비어있는데 외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 무안읍, 장성읍, 진도읍을 조사한 결과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미사용 토지는 36.7ha, 91.5ha, 23.2ha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군은 녹지 등 주변 임야나 산지, 농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구도심은 더욱 쇠락하고, 외곽의 자연경관은 훼손됐다.

전남도내 각 시·군이 확장 일변도의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구도심 쇠퇴와 난개발, 과밀·고층화 등이 심화하고 있다. 단체장의 공약이나 지역개발,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일선 시·군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외곽 개발에만 나서면서 재정 여건도 악화하는 추세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인당 평균 면적은 각

각 119.46㎡, 14.98㎡, 6.23㎡로, 모두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난개발 탓이다. 전국 평균은 주거지역의 경우 48.17㎡,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각각 5.97㎡, 2.69㎡에 불과했다.

전남 시·군들이 인구에 비해 과도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업 및 편의시설을 외곽 곳곳에 설치하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늘어나 재정 역시 궁핍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최근 화순에서 열린 ‘도시계획연합회 및 정기학술세미나’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향후 시·군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저탄소 녹색도시 등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인구감소·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도시공간구조를 갖췄는지, 실제 생활권을 고려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철 목포대 교수는 “현재 시·군이 만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초조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도시 확장, 인구 증가 등만을 염두에 둔 개발만을 위해 작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전남도의 자연 및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광주~완도 고속도로 빨리 착공하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착공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2년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2013년 예산 반영을 약속했던 사안이었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원들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대로 우선 광주~해남 구간을 순차 건설하는 것으로 양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정된 실시설계 예산 100억원을 불

용시키고 또다시 경제성을 빌미로 광주~강진 구간을 강요하는 것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완도 고속도로 총연장 90km에서 38km를 배제하고 52km만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1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마저 잘못된 호남 홀대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문에는 여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21명이 모두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수능 D-8 ... “정답 잘 찍으세요” 손도끼 퍼포먼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아흐레 앞둔 4일 광주 조대여고 1·2학년 학생 500여명이 운동장에서 촛불과 LED 등을 이용해 ‘정답을 잘 찍으라’는 의미에서 손도끼와 ‘400점 만점’ 형상을 만들어 3학년 선배들의 수능 합격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코 앞인데...추진단 힘빼는 문화부

추진단장 1급→2급 격하시키고 전당운영협력과는 없애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 추진 동력 떨어질까 우려

문화부가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되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직을 축소하고 핵심보직의 직급을 격하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2면>

4일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자로 일부 부서에 대한 직제개편을 단행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 소속 5개과 중에서 전당운영협력과는 없앴다. 전당운영협력과는 기존에 있던 추진단의

문화도시정책과로 흡수됐다.

직급 조정도 단행돼 1급(차관보급) 자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2급으로 내려 앉았다. 추진단장은 문화전당 건립을 도맡고 있는 컨트론타워이자 국책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보직이다.

전직 문화부의 고위 관료는 “추진단장의 직급을 문화부 국장급으로 깎아내리고 기구를 축소한 것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려하지 않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며 “지위가 격하된 추진단장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운영협력과의 통폐합은 문화전당 활성화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의 직원 10명 가운데 3명(과장 포

함)는 전출하고 7명만 문화도시정책과로 흡수되는 바람에 업무 고유의 성격을 살리고 현안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서는 문화전당의 국제교류를 뒷받침하는 핵심기구로, 문화전당 5개원의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을 관장하고 있다. 광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를 비롯해 광주시가 최근 유치를 선언한 ‘201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문화장관회의’와 관련, 긴밀한 공조 파트너이기도 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운영조직이 신설되고 추진단의 직제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국가의 문화융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할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맞물려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 학교 062)605-1130

광주 지하철2호선
이달내 결론낸다▶3면
컬처 & 피플
성악가 김동규 ▶17면

HERA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암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